

일본

□ FY 2012: 2012.4 ~ 2013.3

□ 2012회계연도 예산편성 일지

- 2011. 9.20 FY2012 예산 편성에 대한 정부의 기준
- 2011. 10.5 FY2012 각부처의 예산요구 금액
- 2011. 10.12 FY2012 각부처의 예산요구서 및 정책평가 조서 공개
- 2011. 12.24 FY2012 예산 정부안 결정
- 2012. 1.24 FY2012 예산 정부안 국회 제출
- 2012. 1.24 FY2012 예산 정부안 국회 심의 개시

□ 출처:

- 概算要求組替え基準閣議決定 (2011.9.20)
- 平成24年度一般會計概算要求額等 (2011.10.5)
- 各府省の概算要求書・要望及び政策評価調書公開ページへのリンク先一覽 (2011.10.12)
- 円高への総合的対応策(2011.10.21)
- 財政の健全化に向けた考え方について(2011.12.9)
- 經濟見通しと經濟財政運營の基本的態度 (2011.12.22)
- 平成24年度予算政府案 (2011.12.24)
- 我が國の財政事情 (2011.12)
- OECD Economic Outlook 90 (2011.11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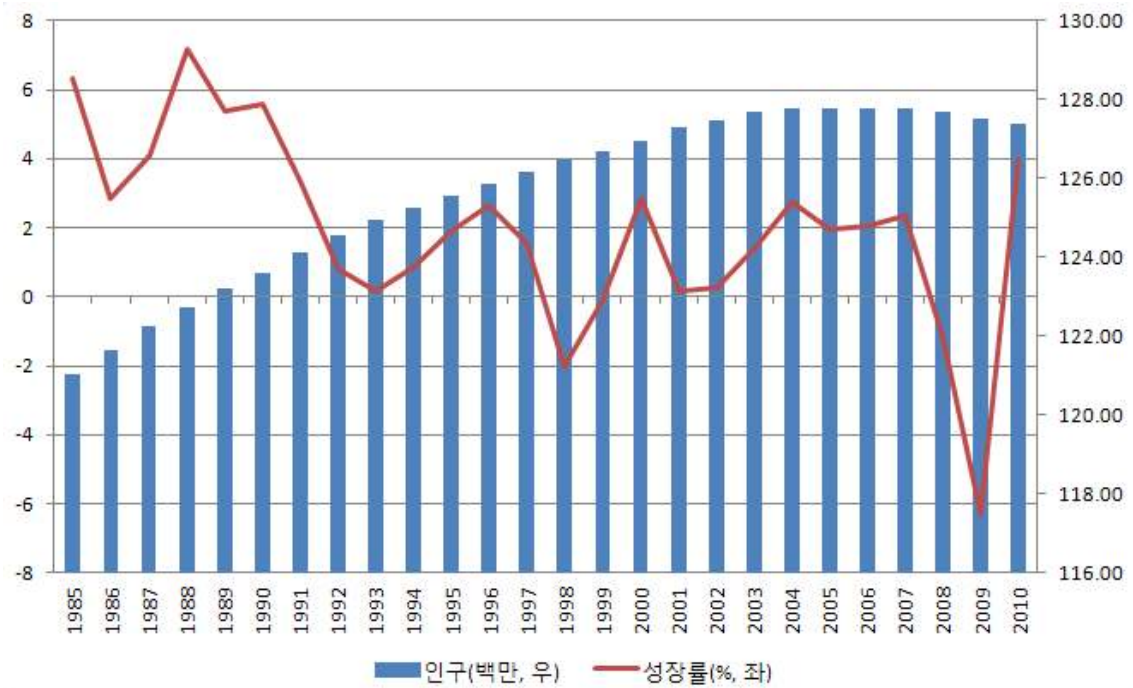
□ 환율: 100엔 = 약 1,391.31원 (2011년도 평균)

□ 경제규모: 2010년 경상GDP 4조 2,993억 달러(우리나라 3.0배 수준)

□ 수출입의 대 GDP 비율(명목): 2010년 기준 29.3%(우리나라 102.0%)

□ 인구: 1억 2,700만명(2011년 기준)

□ 성장률 및 인구 추이 :



<요 약>

◇ 경제 및 재정전망

- 2012년도 일본 경제는 본격적으로 부흥시책을 추진함에 따라 꾸준한 수요의 증대와 고용창출이 예상되고, 국내수요가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2% 초반의 성장률이 예상됨
- 2012년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약 8.4%, 국가채무 비율은 219.1%를 기록할 전망

◇ 예산기조: 2012년도 예산은 중기 재정 프레임에 준수하면서, 동일본 대지진 및 원자력 재해의 신속한 복구재건과 세계적인 금융경제 위기에 직면한 경제 사회의 재생에 중점을 두고 구성

◇ 예산안 내용

- FY2012 조세 및 인지도입은 전년대비 3.5% 증가한 42조 3,460억엔으로 예상
- FY2011 세출은 재정건전화 및 중기재정프레임 유지를 위하여 전년대비 2.2% 감소한 90조 3,339억엔 편성

◇ 주요 재정정책

- 엔고의 종합적 대응책
 - 최근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엔고 및 디플레이션 방지를 위해 25.6조엔 규모의 대응책 수립
 - 실질 GDP 0.5% 상승 및 약 30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 기대
- 일본재생중점화조치
 - 4개 분야(새로운 국경 및 신성장 전략, 교육·고용 등의 인재육성, 지역 활성화, 안심·안전 사회 실현)에 대한 중점화 조치 추진
- 재정건전화
 - 2010년대 중반까지 단계적인 소비세율의 인상(10%)을 통한 재정건전화 목표 달성 도모

<최근 재정 및 경제 동향 일지>

| 일시 | 주요 정책 및 사건 | 참고자료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
| 2011. 2. 2 | 「재정운영전략」 이행 상황 검토결과 발표 | 재정동향 6호 |
| 2011. 2. 10 | 「新성장 전략 실현 2011」 발표 | |
| 2011. 4. 22 | FY2011 1차 추경안 발표 | |
| 2011. 5. 17 | 「정책추진지침」 발표 | 재정동향 7호 |
| 2011. 7. 5 | FY2011 2차 추경안 발표 | |
| 2011. 9. 20 | FY2012 예산 편성에 대한 정부의 기준 결정 | |
| 2011. 10. 21 | FY2011 3차 추경안 발표 | |
| 2011. 10. 21 | 「엔고의 종합적 대응책」 발표 | |
| 2011. 12. 9 | 「재정건전화를 위한 생각에 대해」 발표 | |
| 2011. 12. 20 | FY2011 4차 추경안 발표 | |
| 2011. 12. 22 | 경제재정운영의 기본적 태도 발표 | |
| 2011. 12. 24 | FY2012 예산안 발표 | |

1. 경제 및 재정전망

가. 경제전망

- 일본의 2011년도 국내총생산 실질성장률은 $\Delta 0.1\%$, 명목성장률은 $\Delta 1.9\%$ 로 전망됨
 - 2011년 일본 경제는 3월 동일본대지진의 여파로 심각한 타격을 받아, 마이너스 성장이 계속되는 등 어려운 상황에서 시작
 - 민관이 총력을 기울여 급속도의 경기회복을 보였으나 여름이후 급속한 엔고진행 및 유럽 정세 악화로 회복 둔화
 - 2011년 정부가 4차례 추경예산 편성하여 부흥을 지원함으로써 2012년에는 완만한 경기 회복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
 - 물가동향은 완만한 디플레이가 계속될 전망이며, 소비자물가는 3년 연속 하락

- 2012년도 일본경제는 본격적으로 부흥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꾸준한 수요의 증대와 고용창출이 예상되고, 국내수요가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
 - 2012년도의 국내총생산의 실질성장률은 2.2%, 명목성장률은 2.0%로 예상되어 2011년 대비 국내총생산의 실질 및 명목성장률이 모두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됨
 - 물가, 소비자물가상승률은 GDP 갭의 축소 등에 의해 0.1%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, GDP 디플레이터는 완만하게 하락하고 실업률은 고용률의 완만한 증가에 따라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

- 하지만, 역대 최고 수준의 엔화 강세와 유로존 위기 등 글로벌 경기둔화로 인한 우려가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 2012년 일본의 성장률은 2% 내외로 전망
 - 일본 중앙은행(BOJ)은 FY2012 일본 경제성장률 전망을 2.2%(2011.10)에서 2.0%로 하향 조정(2012.1)
 - 국제통화기금(IMF)은 1.7%, 세계은행(WB)는 1.9%,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는 2.0%로 전망
 - 일본 내 주요경제연구소들은 2012년도 일본 경제성장률을 2% 초반으로 전망

- 다이와증권그룹 2.6%, 일본종합연구소 2.4%, 미즈호종합연구소 2.0%로 예측

<표 III-1>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전망

(단위 : 전년대비, %, 조엔)

| 구분 | 2010 실적 (명목) | 2011 추정 (명목) | 2012 전망 (명목) | 전년대비증가율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|-------|
| | | | | 2010 | | 2011 | | 2012 | |
| | | | | (명목) | (실질) | (명목) | (실질) | (명목) | (실질) |
| 국내총생산 | 479.2 | 470.1 | 479.6 | 1.1 | 3.1 | △1.9 | △0.1 | 2.0 | 2.2 |
| 민간최종소비 지출 | 284.2 | 282.7 | 285.4 | △0.0 | 1.6 | △0.5 | 0.3 | 1.0 | 1.1 |
| 민간주택투자 | 13.0 | 13.5 | 14.5 | 2.8 | 2.3 | 4.1 | 2.9 | 7.3 | 6.3 |
| 민간설비투자 | 62.1 | 61.0 | 64.2 | 2.1 | 3.5 | △1.7 | △1.1 | 5.2 | 5.1 |
| 민간재고품 증가 (기여도) | △1.5 | △2.4 | △1.8 | (0.8) | (0.8) | (△ 0.2) | (△ 0.2) | (0.1) | (0.1) |
| 재화서비스수출 | 73.8 | 72.5 | 77.2 | 14.4 | 17.2 | △1.8 | 0.0 | 6.6 | 6.5 |
| (공제) 재화서비스수입 | 69.5 | 76.9 | 80.2 | 15.5 | 12.0 | 10.7 | 4.6 | 4.2 | 3.3 |
| 내수기여도 | | | | 1.1 | 2.4 | △0.1 | 0.6 | 1.7 | 1.8 |
| 민간 | | | | 1.1 | 2.3 | △0.6 | 0.0 | 1.6 | 1.6 |
| 공공 | | | | 0.0 | 0.1 | 0.6 | 0.6 | 0.1 | 0.2 |
| 외수기여도 | | | | △0.0 | 0.8 | △1.8 | △0.7 | 0.3 | 0.4 |
| 노동·고용 | 만명 | | | % | | | | | |
| 노동력인구 | 6,587 | 6,538 | 6,551 | △0.3 | | △0.7 | | 0.2 | |
| 취업자수 | 6,257 | 6,243 | 6,269 | △0.1 | | △0.2 | | 0.4 | |
| 고용자수 | 5,469 | 5,474 | 5,518 | 0.2 | | 0.1 | | 0.8 | |
| 실업률 | 5.0 | 4.5 | 4.3 | | | | | | |
| 생산 | % | | | | | | | | |
| 광공업생산지수 | 8.9 | △1.9 | 6.1 | | | | | | |
| 물가 | % | | | | | | | | |
| 생산자물가지수 | 0.7 | 1.9 | 0.7 | | | | | | |
| 소비자물가지수 | △0.4 | △0.2 | 0.1 | | | | | | |
| GDP디플레이터 | △2.0 | △1.8 | △0.2 | | | | | | |
| 국제수지 | 조엔 | | | % | | | | | |
| 무역서비스수지 | 5.2 | △3.6 | △1.7 | | | | | | |
| 무역수지 | 6.5 | △1.6 | 0.1 | | | | | | |
| 수출 | 64.5 | 64.2 | 69.1 | 16.0 | | △0.4 | | 7.6 | |
| 수입 | 58.0 | 65.8 | 69.0 | 18.4 | | 13.6 | | 4.8 | |
| 경상수지 | 16.1 | 9.9 | 12.2 | | | | | | |
| GDP대비경상수 지(명목,%) | 3.4 | 2.1 | 2.5 | | | | | | |

자료: 내각부, 「經濟見通しと經濟財政運營の基本的態度」, 2011.12.22

<표 III-2> 주요 재정지표 추이

(단위: GDP대비 %)

| 구 분 | 실적 | | | 2011 추정 | 2012 전망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| 2008 | 2009 | 2010 | | |
| 재정수지 ¹⁾ | △3.3 | △9.3 | △8.1 | △8.8 | △8.4 |
| 재정수지 ²⁾ | △3.9 | △10.5 | △9.0 | △9.7 | △9.4 |
| 국채 비율 | 174.1 | 194.1 | 200.0 | 211.7 | 219.1 |
| 채권잔액 비율 | 110(546조엔) | 125(594조엔) | 132(636조엔) | 144(676조엔) ³⁾ | 148(709조엔) |
| 국가 및 지방 장기채무 비율 | 157(770조엔) | 173(819조엔) | 180(862조엔) | 192(903조엔) | 195(937조엔) |
| 국채의존도 ⁴⁾ | 39.2 | 51.5 | 44.4 | 51.9 | 49.0 |

주: 1) OECD 「Economic outlook 90」 자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사회보장기금을 제외한 수치
 2) OECD 「Economic outlook 90」 자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사회보장기금을 포함한 수치
 3) 3차 추경을 포함한 채권잔액 비율
 4) 국채의존도=국채발행액/총재정지출
 자료: 재무성, 「平成23年度予算政府案」, 2011.12.24

2. 예산기조

□ 2012년 개산요구의 기준 및 틀 발표 (2011.9.20)

- 2012년도 예산은 재정운영에 있어 「중기 재정 프레임」을 준수하면서, 동 일본 대지진 및 원자력 재해의 신속한 복구재건과 세계적인 금융경제 위기에 직면한 경제 사회의 재생에 중점을 두고 구성
 - i) 2011년도 제3차 추경 예산 등과의 일체적·연속적인 편성
 - 동일본 대지진의 복구 및 부흥 대책에 대해서는 2011년도 제1차 및 제2차 추경 예산 등을 착실하게 집행하고, 향후 예정된 2011년도 제3차 추경 예산 등과 2012년도 예산을 일체적, 연속적으로 편성
 - ii) 일본 경제 사회의 재생을 위한 노력 (「일본 재생 중점화 조치」)
 - 일본 경제 사회의 재생을 위한 조치로써, 세출 개혁에 의해 마련되는 재원을 이용하여 재생을 위한 더 효과적인 시책에 예산을 중점적으로 배분하도록 노력

□ 일반회계 예산 프레임

- 「일본 재생 중점화 조치」에서 일본 경제 사회의 진정한 재생에 기여하기 위해 예산을 중점 배분
- 「예산절감형 정책 분류」의 제언 등을 감안하여 기존 예산을 검토
- 공무 부문의 낭비를 철저히 삭감
- 2011년도 추경 예산에 이어 동일본 대지진의 복구·부흥에 전력으로 대응
- 시장의 신임 확보를 위해 「중기 재정 프레임」(세출 범위 약 68.4 조엔, 신규 국채 발행액 약 44 조엔)을 견지

3. 예산안 내용

<표 III-3> FY2012 일반회계 세입·세출예산

(단위: 억엔, %)

| 구 분 | FY2011 추정(A) | FY2012 전망(B) | 비교증감액 (B-A) | 증감율 (%)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세 입 | | | | |
| 조세 및 인지수입 | 409,270 | 423,460 | 14,190 | 3.5 |
| 기타 수입 | 71,866 | 37,439 | △ 34,427 | △ 47.9 |
| 국채발행 | 442,980 | 442,440 | △ 540 | △ 0.1 |
| 계 | 924,116 | 903,339 | △ 20,777 | △ 2.2 |
| | | | | |
| 세 출 | | | | |
| 국채비 | 215,491 | 219,442 | 3,951 | 1.8 |
| 기초재정수지 경비 | 708,625 | 683,897 | △ 24,728 | △ 3.5 |
| 계 | 924,116 | 903,339 | △ 20,777 | △ 2.2 |

주: 동일본 대지진의 복구·부흥 대책에 관한 세입·세출에 대해서는 별도로 동일본 대지진 부흥 특별 회계(가칭)에 계상

자료: 재무성, 「平成24年度予算政府案」, 2011.12.24

가. 세입

- FY2012 세입규모는 지난해 대비 2조 777억엔(2.2%) 감소한 90조 3,339억엔 수준
 - 조세 및 인지수입은 지난해에 비해 3.5% 증가하여 42조 3,460억엔으로 예상
 - 전년대비 13.04% 증가한 법인세와 15.81% 증가한 담배세, 11.66% 증가한 관세가 세입증가분의 약 87%를 차지
 - 반면 기타수입은 지난해에 비해 3조 4,427억엔(47.9%) 가량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
 - 국채 발행액은 지난해에 비해 504억엔이 감소한 44조 2,440억엔 수준

<표 III-4> FY2012 조세 및 인지수입

(단위: 억엔, %)

| 세 목 (일반회계) | FY2011 | | FY2012 | 전년대비 | | |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-|
| | 예산 (당초) | 추경 ¹⁾ | 예산안 | 예산 (당초) | | 추경 | |
| | (A) | (B) | (C) | (C-A) | 증감률 | (C-B) | 증감률 |
| 원천소득세 | 111,720 | 109,890 | 110,940 | △780 | △0.70 | 1,050 | 0.96 |
| 신고소득세 | 23,180 | 24,110 | 23,970 | 790 | 3.41 | △140 | △0.58 |
| (소득세 계) | (134,900) | (134,000) | (134,910) | (10) | (0.01) | (910) | (0.68) |
| 법인세 | 77,920 | 88,070 | 88,080 | 10,160 | 13.04 | 10 | 0.01 |
| 상속세 | 14,230 | 14,230 | 14,300 | 70 | 0.49 | 70 | 0.49 |
| 소비세 | 101,990 | 101,990 | 104,230 | 2,240 | 2.20 | 2,240 | 2.20 |
| 주 세 | 13,480 | 13,480 | 13,390 | △90 | △0.67 | △90 | △0.67 |
| 담배세 | 8,160 | 9,940 | 9,450 | 1,290 | 15.81 | △490 | -4.93 |
| 취발유세 | 26,340 | 26,340 | 26,110 | △230 | △0.87 | △230 | △0.87 |
| 석유가스세 | 120 | 120 | 110 | △10 | △8.33 | △10 | △8.33 |
| 항공기연료세 | 460 | 460 | 440 | △20 | △4.35 | △20 | △4.35 |
| 석유석탄세 | 5,120 | 5,120 | 5,460 | 340 | 6.64 | 340 | 6.64 |
| 전원개발촉진세 | 3,460 | 3,460 | 3,290 | △170 | △4.91 | △170 | △4.91 |
| 자동차중량세 | 4,280 | 4,280 | 4,170 | △110 | △2.57 | △110 | △2.57 |
| 관 세 | 8,150 | 8,150 | 9,100 | 950 | 11.66 | 950 | 11.66 |
| 톤 세 | 90 | 90 | 100 | 10 | 11.11 | 10 | 11.11 |
| 인지수입 | 10,570 | 10,570 | 10,320 | △250 | △2.37 | △250 | △2.37 |
| 합계 | 409,270 | 420,300 | 423,460 | 14,190 | 3.47 | 3,160 | 0.75 |

주: 1) 추경은 4차까지 포함
 자료:재무성, 「平成 24年度租税及び印紙收入概算」, 2011.12.24

나. 세출

- FY2012 세출은 '11년에 비해 2.2% 감소한 90조 3,339억엔 편성
- 재정건전화를 강화하고 중기재정프레임을 유지하기 위해 대부분의 세출은 2011년도에 비해 감소할 전망
 - 사회보장관계비(△8.1%)와 연금관계비(△11.2)의 축소가 두드러짐
 - 국채비는 1.8% 증가한 21조 9,442억엔으로 전망됨

<표 III-5> FY2012 일반회계 분야별 일반세출 내역

(단위: 억엔, %)

| 구 분 | FY2011 | FY2012 | 비교증감액 | 증감률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|--------|
| | 당초(A) | 전망(B) | (B-A) | (%) |
| 사회보장관계비 | 287,079 | 263,901 | △ 23,177 | △ 8.1 |
| 문교 및 과학진흥비 | 55,100 | 54,057 | △ 1,043 | △ 1.9 |
| 국채비 | 215,491 | 219,442 | 3,951 | 1.8 |
| 연금관계비 | 6,434 | 5,712 | △ 722 | △ 11.2 |
| 지방교부세교부금 | 167,845 | 165,940 | △ 1,905 | △ 1.1 |
| 방위관계비 | 47,752 | 47,138 | △ 614 | △ 1.3 |
| 공공사업관계비 | 49,743 | 45,734 | △ 4,009 | △ 8.1 |
| 경제협력비 | 5,298 | 5,216 | △ 82 | △ 1.6 |
| 중소기업 산업대책비 | 1,969 | 1,802 | △ 167 | △ 8.5 |
| 에너지대책비 | 8,559 | 8,202 | △ 357 | △ 4.2 |
| 식료안정공급관계비 | 11,587 | 11,041 | △ 545 | △ 4.7 |
| 기타경비 | 55,660 | 62,554 | 6,894 | 12.4 |
| 경제위기대응·지역활성화 예비비 | 8,100 | 9,100 | 1,000 | 12.3 |
| 예비비 | 3,500 | 3,500 | - | - |
| 합계 | 924,116 | 903,339 | △ 20,777 | △ 2.2 |

자료:재무성, 「平成 24年度一般會計歳入歳出概算」,2011.12.24

<참고 1> FY2012 동일본대지진 부흥 특별회계(가칭) 예산 프레임

(단위: 억엔)

| 세 입 | |
|--------------|--------|
| 부흥특별세 | 5,305 |
| 일반회계로부터의 수입금 | 5,507 |
| 세외수입 | 118 |
| 부흥채 | 26,823 |
| 계 | 37,754 |
| 세 출 | |
| 동일본대지진부흥경비 | 32,500 |
| 부흥채비 | 1,253 |
| 동일본대지진부흥예비비 | 4,000 |
| 계 | 37,754 |

자료: 재무성, 「平成24年度予算政府案」, 2011.12.24

<참고 2> 중기재정프레임(재무성, 2011.12.24)

① 국채발행액

- 2012년도 신규 국채발행액(부흥채권 제외)은 2011년도 당초 예산수준(44조 엔)을 초과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함

② 세입 측면

- 세제의 개혁에 대해서는 2010·2011년도 세제개정대강이나 「사회 보장·세 일체개혁방안」 등을 바탕으로 다시 검토를 진행하고, 2009년도 세제개정법률 부칙 제104조에 따라 2011년도 내에 필요한 법제상의 조치를 강구

③ 세출 측면(2012~2014년도)

- 「기초재정수지대상경비」는 전년도 당초 예산규모(세출 범위)를 실질적으로 초과하지 않음
- 다만, 동일본 대지진의 복구·부흥 대책에 관한 경비에 있어서, 기존 세

출의 삭감에 의해 충당되는 금액을 초과한 금액 중 부흥채권, 추가적인 세외수입의 확보 및 시한적인 세제 조치로 확보 금액에 대해서는 재원과 함께 별도로 관리해 세출 범위에 가산

- 또, B 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자에 대한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경비 중 시한적인 세제 조치 등에 의해 확보된 금액에 대해서는 재원과 함께 별도로 관리해 세출 범위에 추가

(단위: 조엔)

| | 세출 범위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| 2012년도 | 2013년도 | 2014년도 |
| 기초재정수지대상경비 ¹⁾ | 71 | 71 | 71 |
| (연금차액분 제외 금액) | 68.4 | 68.4 | 68.4 |
| 경제위기대응·지역활성화예비비 ²⁾ | 1 | 1 | 1 |

주: 1) 2012년도 이후의 세출 범위는, 세제개혁에 의해 확보되는 재원을 활용해 연금재정에 편입하는 연금차액분(기초연금국고부담비율 1/2로 36.5%의 차액)을 포함한다.

2) 2011년도 0.8조엔

자료: 재무성, 「平成24年度予算政府案」, 2011.12.24

4. 주요 재정정책

가. 「엔고의 종합적 대응책」 발표(내각부, 2011.10.21)

□ 일본은 최근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엔고 및 디플레이션 방지를 추구하기 위해 경기 하락 및 산업공동화의 위험을 초래하는 엔고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책을 발표

○ 본 대응책의 5가지 기본원칙

i) 외환시장의 단호한 조치 및 적절한 금융 정책, 재정규율의 유지, 국채 신임 확보 등을 통한 시장의 안정 유지

ii) 엔고와 공동화에 대처하고, 성장을 뒷받침하는 효과적인 시책을 엄선

- 온라인 기업 등으로 엔고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강인한 경제의 구축

- 대지진에 따른 부흥 자체가 대규모 수요이므로 부흥 수요를 조기 발현

iii) 엔고에 따른 "고통"을 최소화하는 한편, 장점을 극대화

- 엔고로 타격을 받는 기업 취업자의 불안을 해소
- 엔고 혜택 철저 활용
- iv) 진행관리를 통한 성과 창출
- v) 새로운 성장을 위한 노력의 강화

□ 엔고에 대한 구체적 대응방안

○ 엔고에 따른 “고통”의 완화

- i) 신입 청년층 취업지원 확충, 적극적인 노동 시장 정책의 강화 등을 통한 고용 창출 뒷받침

- ii) 엔고로 곤경에 빠져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등의 확충

- 모든 업종에 대해 안전망 보증 연장 요건 완화를 통한 대상 확대
- 안전망 대출 금리 인하(최대 0.5%) · 시설자금 대출 금리 인하(0.5%) 실시
- 위기 대응 업무의 일본 정책 투자 은행 등을 통한 융자 금리 인하(0.5%) 실시

- iii) 지진과 엔고로 고통 받는 관광 지원

- 지진 원자력 재해 및 엔고 현상으로 인해 일본 관광객 수는 전년 대비 3% 감소
- 방일 여행자 수를 지진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방일 여행자 수가 많은 시장에 대한 중점적인 여행자 유치 프로모션, 국제회의 취소 방지 대책, 민간 지자체와의 방일 여행자 유치를 위한 협력 강화 등 노력 강화

- iv) 농림 수산업의 "고통"의 완화

- v) 부흥 수요의 조기 발현

○ 위협에 무너지지 않는 강인한 경제 구축

- i) 입지 보조금의 확충 등에 의한 경쟁력 강화

- 엔고 등에 의한 산업 공동화 우려에 대처하기 위해 공급망에 필수적인 부품 · 재료 분야 및 고부가가치 분야의 생산 연구 개발 거점 입지에 대한 보조 등 5,000억엔 투입

- ii) 에너지 절약 · 신에너지 도입 지원 강화에 따른 수요 확대
- iii) 세계 온라인 기업 기술 육성
 - 비가격 경쟁력을 갖춘 온라인 기업의 육성을 목표로 일본의 강점인 중소기업 금속 가공 등의 제조 기술력 고도화 등을 지원
- iv) 창업 기업 강력 지원
- v)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판로 개척 지원 등을 통한 세계 시장에 도전 지원
- vi) 종합 특구 추진 등에 의한 국제 경쟁력 강화
 - 국제 전략 종합 특구 및 지역 활성화 종합 특구지정 및 계획 수립
 - "아시아 거점화 대일 투자 촉진 프로그램 (가칭)" 수립 계획
- vii) 국내 입지 기업이 직면한 고난에 대처
 - 새로운 성장을 위한 전략 강화 및 일본 재생 전략 재정비
 - 에너지 기본 계획을 백지에서 검토하고 2012년 여름을 목표로 "혁신적인 에너지 환경 전략"을 책정
- 엔고 현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해외 M & A 촉진, 자원 확보, 일본 학생의 해외파견, 고급 인력 수용 등을 통한 엔고 장점 적극 활용

□ 본 대응책으로 ①실질 GDP 0.5% 상승 및 ②약 30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

<표 III-6> 대응책의 규모

(단위: 조엔)

| | 국비 | 사업비 |
|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
| 1. 엔고에 의한 고통 완화 | 1.1 | 12.1 |
| 중점분야고용창출사업의 확충 | 0.2 | 0.2 |
| 중소기업 금융지원 등 확충 | 0.6 | 11.5 |
| 2. 위협에 강인한 경제 구축 | 0.9 | 11.4 |
| 입지보조금 확충 | 0.5 | 1.2 |
| 절전에코보조금 등 | 0.2 | 0.4 |
| 주택에코포인트의 재편·재개 | 0.1 | 9.7 |
| 3. 엔고장점의 철저한 활용 | 0.04 | 0.07 |
| 합 계 | 2.0 | 23.6 |

주: 국비는 일반회계임. 사업비는 현시점에서의 전망을 보여줌
 자료: 내각부, 「円高への総合的対応策」, 2011.10.21

나. 「일본재생중점화조치」 (재무성, 2011.12.24)

- FY2012 예산안의 핵심내용으로 일본의 재생을 위해 4개 분야에 대한 중점화 조치를 추진
 - 세출 삭감을 통해 마련한 재원을 이용하여 일본 재생을 위한 더 효과적인 시책에 예산을 중점 배분하는 노력 (「일본 재생 중점화 조치」)을 실시
 - 일본 경제 사회를 재생하고 국민 개개인이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 4개 분야에 대해 예산을 중점적으로 배분
 - 개산 요구 단계 당시 7000억엔 규모였으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세출 삭감을 활용하여 1 조엔 규모로 확대
 - 「일본재생중점화조치」의 대상이 된 4개 분야
 - i) 새로운 국경 및 신성장 전략(과학 기술 에너지 해양 우주 등 인프라 정비를 포함한 성장 기반 강화)
 - 예) 위성 시스템의 정비·운용 (내각부), 자원 권익 확보 (경제산업성), 중소기업의 해외 전개 기술력 강화 (경제산업성), 환경 기술을 활용한 재활용 대책 (환경부)
 - ii) 교육 (스포츠 포함) · 고용 등의 인재 육성
 - 예) 새로운 스포츠 문화 창조 프로젝트에 의한 일본 재생 (문부과학성)
 - iii) 지역 활성화
 - 예) 오키나와 진흥 예산 (내각부), 철도에 의한 지역 활성화 (국토교통성)
 - iv) 안심 · 안전 사회 실현
 - 예) 치안 수준의 향상을 위한 종합 대책 추진 (경찰청), 집중 호우 등에 의한 재해 방지 대책 (농림수산성), 수해 토사 재해 해일 대책 (국토교통성), 재해에 대한 대처 능력 향상 (국방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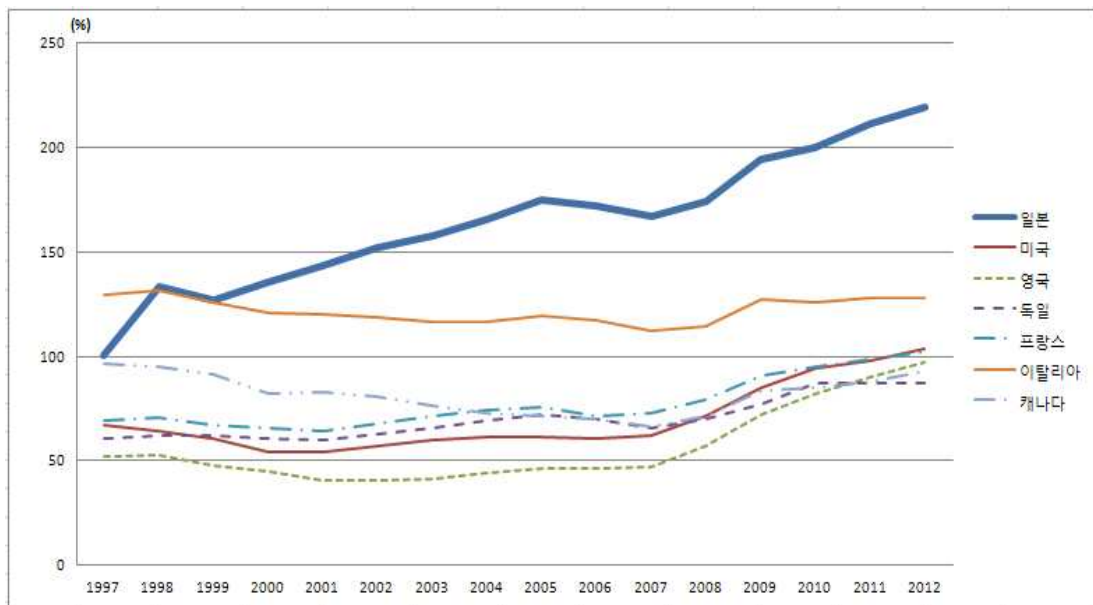
<표 III-7> 일본재생중점화조치 분야별 우선·중점사업

| (단위: 억엔)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
| 분야별 주요 사업 | 규모 |
| 새로운 국경 및 신성장전략 | |
| 위성 시스템의 정비 운용 (내각부) | 41 |
| 정보 통신 기술의 연구 개발·활용 촉진 (총무성) | 89 |
| 패키지형 인프라 해외 전개와 녹색 성장의 촉진 (외무성) | 301 |
| 새로운 성장을 견인하는 대학 연구 기반 강화 사업 (문부과학성) | 483 |
| 해양 프런티어에 도전 (문부과학성) | 27 |
| 자원 권익 확보 (경제산업성) | 177 |
| 건강 관리 산업의 창출 (경제산업성) | 33 |
| 중소 기업 해외 전개 기술력 강화 (경제산업성) | 30 |
| 간선 도로 네트워크의 정비 (국토교통성 등) | 1,440 |
| 수도권 공항의 강화 (국토교통성) | 118 |
| 환경 기술을 활용한 재활용 대책 등 (환경부 등) | 60 |
| 교육(스포츠 포함)·고용 등의 인재육성 | |
| 새로운 스포츠 문화창조 프로젝트에 의한 일본재생 (문부과학성) | 35 |
| 지역활성화 | |
| 오키나와 진흥 예산 (내각부) | 773 |
| 철도에 의한 지역 활성화 (국토교통성) | 50 |
| 안심·안전 사회 실현 | |
| 정보 수집 위성의 연구 개발 (내각 관방) | 40 |
| 치안 수준의 향상을 위한 종합 대책 추진 (경찰청) | 85 |
| 안심·안전 사회 실현을위한 형사 사법 기반 강화 (법무부) | 72 |
| 재택 의료·개호 추진 (후생 노동성) | 18 |
| 집중 호우 등에 의한 재해 방지 대책 (농림수산성 등) | 200 |
| 수해 토사 재해 해일 대책 (국토교통성 등) | 645 |
| 재해에 대한 대처 능력 향상 (국방부) | 56 |

다. 「재정건전화에 대한 소고」 발표(재정제도분과회의, 2011.12.9)

- 일본의 재정 현황 : 국제적으로 재정건전화가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는
현 시점에서 일본의 재정은 주요 선진국 중에서도 최악의 상황
 - 세출과 세입이 매년 크게 괴리되는 상황이며, 이는 주요국과 비교해도 심각한 재정 구조
 - 채권 발행액은 해마다 누증하고, 채권금 수입이 세수를 3년 연속 웃도는 적자 상황
 - 2011년 말 212%에 달하는 GDP 대비 부채(채무잔고)비율은 주요국 최악의 수준
 - 사회보장비의 자연 증가는 경제 규모의 확대를 훨씬 웃돌아, 사회 보장 관계 비는 20년여 만에 2.5배 팽창
 - 150조엔을 넘는 국채 총 발행액과 세수 규모의 2배를 상회하는 국채상환액

[그림 III-1] 국가별 GDP 대비 부채비율



주: 수치는 일반회계 바탕으로 작성
 자료: 재무성, 「我が國の財政事情」, 2011.12
 OECD 「Economic outlook 90」, 2011.12

□ 구체적인 재정건전화 방안에 대해 논의

- 2010년대 중반까지 단계적으로 소비세율을 10%까지 높여 재정운영전략에 정해진 2015년도 재정건전화 목표 달성을 도모
- 일본 재정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관점에서 재정건전화를 계획·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, 2015년도까지 매년 비슷한 속도로 기초재정수지 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재정건전화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
 - 2015년도의 재정건전화 목표 달성은 재정 건전화를 향한 이정표이며, 2020년도의 재정건전화를 목표 등의 달성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 언급
- 경제상황을 의식하여 재정건전화를 미룰 경우, 일본 경제에 악영향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정건전화에 대한 꾸준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강조
- 재정의 건전화는 국민 개개인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유지하며 일본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이끌어 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임을 국민에게 이해시키면서, 강한 의지로 재정건전화를 실행에 옮길 필요성이 있음을 역설